‘회복 없는 피해’ 보이스피싱, 환급 갈수록 안되는 이유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4440억원 역대 최고
피해 금액 환급률은 최근 몇년 사이 감소세
금세 빠져나가는 대출빙자형 사기 늘어난 탓
‘피해비율별 지급’ 금감원 환급제도 효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환급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범죄 특성상 생길 수 밖에 없는 환급 제도의 한계, 수법의 고도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 2431억원보다 82.7%나 늘어났고, 하루 12억원이 넘는다. 또 피해자 수는 4만8743명으로 일평균 134명이다. 하루 피해자 1인당 900여만원의 돈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난해 6만933개로 전년 4만5494개보다 33.9% 증가했다.

그런데 피해액 환급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21.5%(389억원)이다. 2016년 26.2%, 2017년 24.6%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의 배경으로는 피해자가 사기였음을 알기 전에 피해액을 빼내는 대출빙자형 사기가 최근 늘어났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엔 검찰·경찰·금감원·지인 등 사칭형에 비해 금융기관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신고했을 때 통장에서 이미 돈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사칭형 피해액은 2016년 580억원, 2017년 622억원 정도를 유지하다 2018년 1346억원으로 늘어난 데 반해, 대출빙자형 피해는 2016년 1344억원, 2017년 1808억원, 2018년 3093억원 등 꾸준히 더 높은 피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다보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제도는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급 정지된 계좌에 든 돈 총액을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비율 별로 계산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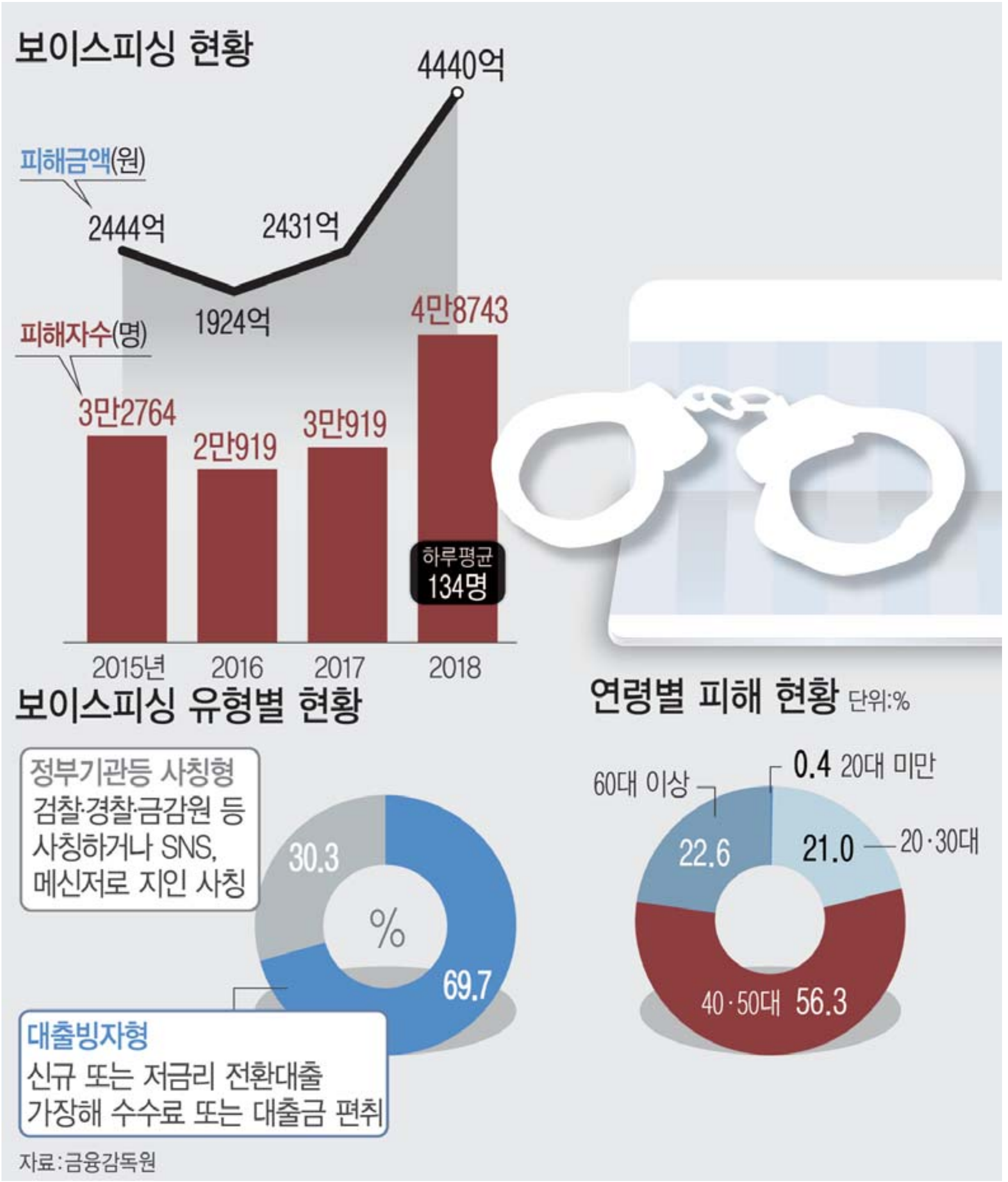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피해 비율별로 환급하는 이유에 대해 “(피해액이 입금된) 시간적인 문제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누구의 돈이 나가는지 돈의 꼬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들에 따르면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유행 초기인 2000년대 중반의 경우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은행에 제시해 피해액 대부분을 찾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경찰은 이같은 조치를 거의 취하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은 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직접 특정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요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돈을 거의 찾기 힘들다”면서 “영장을 발부 받아도 돈을 빼오지 못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화로 확인까지 했는데’…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전화 가로채기앱 등 악성 프로그램 활용 신종 보이스피싱 늘어
SNS 등서 지인 사칭하며 급전 요구 메신저피싱도 의심해봐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관련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있다. 오히려 피해금액이 1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치솟는 등 피해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사례를 공개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2431억원) 대비 82.7%(2009억원) 증가했다.

피해액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피해수법도 지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피해 사례를 보면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이라 소개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링크를 따라 해당 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지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란 전화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했는데 방금 통화한 사람이 다시 전화를 받자 의심을 풀고 송금했다가 피해를 봤다. 악성 앱을 통해 전화가 엉뚱한 곳으로 걸린 결과였다.

B씨의 사례는 또 다르다. 어느날 300만원 가까운 해외결제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은 B씨는 급하게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가짜 고객센터 상담원이 B씨를 안심시킨 뒤 경찰을 사칭한 또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에 연루됐다고 통보했다. B씨는 수사협조를 빙자한 사기범의 요구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OTP 번호까지 불러준 결과 피해를 면치 못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검찰 출석 요구에 바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전화상 불러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니 자신에게 발부된 영장이 나타났다. 의심을 거둔 C씨는 수사협조를 위해 사기범이 불러준 계좌로 전 재산을 이체했다.

신규대출이나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란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SNS 등에서 지인을 사칭하며 급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메신저피싱을 의심해야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통장 대여자나 인출책을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D씨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물품 판매대금을 대신받아 전달해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기재된 연락처에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며칠 뒤 자신의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된 뒤 990만원을 다른 계좌로 전달했는데, 결국 경찰 수사를 받고 피해자와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중이다.

E씨는 100만원치 상품권을 구매해 넘겨주면 알바비 3만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상품권 구매 대행에 나섰다. 하지만 며칠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사기방조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이나 계좌번호를 남에게 아려주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